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한남 정용기 사장(왼쪽에서 첫번째) 및 관계자로부터 전극보일러 설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남

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전환 속도 전극보일러 등 기술 실증 본격화

20MW급 전극보일러 실증 운전 반도체 폐열 활용 시범사업 추진 정용기 사장 “탄소중립 목표 기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남)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열 생산과 반도체 산업 폐열 재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GX)에 속도를 낸다.

한남은 전극보일러 실증사업과 반도체 산업 미활용열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탄소 열공급 체계 구축에 나섰다. 12일 밝혔다.

한남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잉여 전력을 열로 전환해 저장·활용하는 P2H(Power to Heat) 섹터커플링 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성지사에 20MW급 전극보일러를 지난 2월 준공했으며, 현재 실증 운전 중이다. 해당 설비는 출력 조정 범

위가 5~100%로 넓어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실증 과정에서 효율 99.61%, 열 생산 온도 122.79℃ 수준의 성능을 확인했다. P2H 기술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간대의 잉여전력을 활용해 열을 생산·저장했다가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한남은 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협력해 경기 기흥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공정 방류수의 열을 회수하고 히트펌프로 온도를 높여 인근 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지역난방수와 열교환을 통해 공급하는 ‘변온·변유량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약 29% 감축과 함께 연간 약 6억 8000만원 규모 LNG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발주 단계이며 2027년 7월 준공 및 상업운전이 목표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방문해 전극보일러 실증 현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한남 사장은 “P2H와 반도체 미활용열 등 청정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K푸드+’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 현지 수입업체 애로사항 청취 규제 개선·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K푸드+’의 비관세장벽 대응에 나선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을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한 농업 분야 비관세장벽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출관련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해외 현지 수입업체의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접수된 사례 중 농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업계 불편 사항은 단기과제로 분류하여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수출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중장기 과제는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단기과제 중 신속히 처리되어 애로가 해소된 성과사례도 공유됐다.

딸기 품목의 경우, 수출국별·농약성분별로 허용되는 잔류농약 기준이 다르며 국가별로 각각 제공되어 농업인이 해당 기준을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케이베리’(한국딸기수출통합조직)의 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 농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로를 접수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해 현장에서 사용도가 높은 농약 성분을 선별하고 공통 기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수출 농가에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배 품목의 경우, 수출 농가 대상 병해충 방제 교육이 농하기(2~4월)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진행돼 실제 농가에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실제 농약을 살포하는 재배기간(5~7월) 중 현장 밀착형 질의응답을 통한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약안전사용 교육 계획을 개선했다.

김 차관은 “최근 중동상황 등 국제통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K푸드를 국가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우리 농식품이 세계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해외 항만개발 지원사업 공모

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 최대 3억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사 등이 대상이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지원사업은 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등 해외 진출 관련 비용의 70%,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는 국내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건수를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외 항만 개발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본부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공도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날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항만건설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진출 문턱을 낮추고,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적발

육가공업체 9곳 과징금 31.6억 부과 “물가 위협하는 담합행위 감시 강화”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 9곳이 입찰가격과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해오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국민 주요 식재료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재대상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엔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헤드림엘피씨 등 9개 업체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엔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각각 가격 담합을 벌였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입찰을 통해 돼지고기를 구매했는데,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중 8건(계약금액 약 103억원)에서 사전에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합의한 뒤 투찰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과 카카오톡 1대1

대화 등을 통해 가격 수준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가공업체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 납품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총 10차례(계약금액 약 87억원)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위별 가격 또는 가격 인상·인하 폭을 사전에 합의한 뒤 동일한 수준의 견적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이라며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밀가루·전분당·계란 등 식품 분야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ISO 45001’ 인증

김인중 사장 중심 안전경영 역량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재해 없는 안전사업장’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전국 각지에 분포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KRC(농어촌공사)-EVERY 안심일터’ 전략을 수립·실행했다. 인공지능 C/C(폐쇄회로)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했으며, 소규모 현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안전 조치도 함께 추진했다.

사장 중심의 확고한 안전경영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중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람 중심의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발족하는 등 안전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